민주 "부자 감세 등 3대 악법 저지"

강만수 '헌재 접촉' 발언·쌀 직불금 '2대 국기문란 행태' 문책 추진도

■정기국회 중간점검 워크숍서 대응 전략 마련

민주당은 10일 예산·법안심사가 본격화하는 후반기 국회에서 '부자감세법'과 '특혜 악법', '반민주 악법' 등 정부 여당의 이른바 '3대 악법'을 저지하기로 했다.

또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과 쌀 직불금 부당수령 등 '2대 국기문란 행태'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문책에 주력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정기국회 중간점검 국회의원 워크숍'을 갖고 이러한 방향의 후반기 국회 대응전략을 마련했다.

정세균 대표는 "민주당은 부자감세 저지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를 필두로 한 무차별적 부자감세는 극단적 양극화를 초래, 우리 경제의 허리를 꺾는 재앙적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저지키로 한 '3대 악법'은 ▲종부세 완화와 상속세율 인하법, 금산분리 완화법, 무분별한 공기업 민영화법 등 '부자감세법' ▲국정원법과 휴대전화 감청법,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집단소송제법,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는 신문법 등 '반민주 악법'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법과 교육세법 폐지 등 '특혜 악법' 등이다.

박영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기국회 법안심의 전략' 발표를 통해 "무리한 부자감세로 인해 정부의 조세수입 감소가 2009년 13조원, 향후 5년간 25조원에 이르는 동시에 '작은 정부론'이 사실상 포기되고 대규모 토목건설 지출이 확대돼 국가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의 정치사찰, 민간사찰 등 광범위한 국내사찰이 부활돼 이른바 '디지털 유신독재'의 도래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3대 악법'의 저지와 함께 '민생·민주·국민통합'의 3대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3대 입법은 ▲부가가치세·재산세 30% 인하 등 '서민감세법' ▲집시법의 집회·시위 원천금지 조항 삭제와 사이버모욕죄 도입 원천 봉쇄 등 '민주법' ▲국가균형발전법 수호 등 '국민통합법' 등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부자감세 포기와 일자리 창출 확대, 교육복지 확대 등 7대 예산심의 원칙을 제시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17조6천억원이라는 사상 최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키로 하는 등 부자감세와 지출확대를 동시에 추진해 재정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갑원 원내부대표는 "한나라당이 숫적 우세를 바탕으로 각종 악법을 밀어부치려 하겠지만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민주당 2008 정기국회 중간점검 워크숍에서 정세균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 등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헌재 종부세 선고 연기해야"

진상조사 끝날때까지…헌재는 "13일 예정대로 선고"

민주당은 10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 논란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13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의 선고를 연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의원 워크숍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법사위와 기획재정위가 18일까지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진상조사가 끝나기까지는 헌재가 선고해선 안된다"며 "헌재는 국민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검토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강 장관의 발언은 종부세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했다는 것이 확실하다"며 "재정부가 8월 강 장관 명의로 합헌 의견을 냈다가 이후 세제실장이 인사조치되고 10월 위헌 의견으로 바뀐 과정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강 장관의 발언 자체는 헌법유린이자 3권분립 파괴로서, 민주당은 강 장관을 장관, 국무위원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의를 했다"면서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하며,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헌재 판결을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공조해 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키로 하고 진상조사위 활동을 지켜보면서 적절한 시점에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또 11일 국회에서 의원들과 지역위원장, 당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강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고 헌재에도 선고 연기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키로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0일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정치권 등의 요구와 관련, 예정대로 13일 오후 2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가 브리핑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돌입

○…광주시의회가 11일부터 39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제 175회 정례회에서는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관한 감사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의원들은 1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의 주택 난개발 정책 ▲비영리 민간단체의 허술한 보조금 회계처리 및 민간단체 경상·자본 보조사업 운영 현황 ▲시내버스업계의 자구 노력 방안 등을 비롯해 집행기관의 행정·예산 집행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광주시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환경포럼 출범' 세미나

○…국회환경포럼 회장인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10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제18대 국회환경포럼 출범기념세미나를 가졌다.

'기후변화협약과 기업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박 의원은 "국회환경포럼의 정책과 입법 연구 활동의 기본 방침은 정부보다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있다"며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후변화협약'에 발맞춘 선제적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비 50% 사회 환원키로

○…최근 치러진 여수시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돼 화제가 됐던 김상일(민주노동당·여수시 바) 의원이 당초 공약대로 의정비 50%를 사회에 환원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10일 "의원에 당선되기 전에는 전체 의원 의정비 50%를 삭감하려고 했으나 혼자 힘만으로는 안 돼 우선 이달치 의정비 50%를 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라며 "결식아동 돕기 또는 방과후 학습 지원비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3천900만원으로, 의원들은 월정수당 215만원과 의정활동비 110만원 등 325만원을 매달 20일 지급받는다.

/박지경·김지을기자 jkpark@kwangju.co.kr

좌장도 없고 MB정부 성공 해법도 못 찾고

親李 '깊어가는 고민'

한나라당내 친이(친이명박)계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수행했지만, '이명박 정부 성공시키기'라는 새 과제에 직면해서는 지난 8개월여간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향후 정치일정 등을 감안할 때 이명박 정부가 힘껏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내년 한 해라는데 공감하고 있지만, 이를 어떤 방식으로 뒷받침할지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친이 핵심그룹인 안국포럼 출신의 한 의원은 10일 "내년이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유일한 한 해이므로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그동안 (친이 내부에) 균열과 힘의 분산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결국 친이 내부의 '결속 다지기'가 관건인 셈이다.

하지만 구심력을 회복할 '좌장'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 'MB개혁'을 기치에 내걸고 친이계를 리드해 나갈 당내 정치모임도 없는 현실이다.

이상득 전 부의장은 '대통령의 친형'이라는 이유 때문에 전면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며,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렸던 정두언 의원은 정권 초반 격한 내부 논쟁 끝에 한걸음 뒤로 물러서 있다.

대안으로 미국에 체류중인 이재오 전 의원의 조기복귀설이 거론됐지만, 실현을 위한 탄력은 점차 줄어드는 모양새다. 복귀 시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겠느냐는 친이 내부의 물음표 때문이다.

그렇다고 범MB계 모임 가운데 선뜻 '친이 결속다지기'의 선봉에 설 그룹은 없는 상황이며, 친이계 내부에서도 이들 모임을 아우를 조직를 새롭게 출범하는데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안국포럼 출신 의원들이 지난 1일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한데 이어 11일 이상득 전 부의장과 만찬을 함께 하기로 해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안국포럼 출신 의원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원조 비서'라는 소위 대통령 후광효과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연합뉴스

靑 이달 말 전면 조직개편

대변인실-홍보기획관실 통합…현 정원은 유지

청와대가 조직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임기 초 국정을 사실상 마비상태에 이르게 했던 '광우병 파동'과 최근의 금융위기 대처 및 주요 정책 홍보과정에서 청와대가 국정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만큼 기능과 제도를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현재 각 비서관실을 상대로 조직진단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이달 중 조직개편 작업을 마무리한 뒤 내달 초 대통령 훈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조직개편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큰 틀의 윤곽이 잡히지 않았다"면서 "12월 초에 직제개편을 위한 대통령 훈령을 개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456명 현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직을 기능별로 재편할 것"이라면서 "현재 정무도 강화해야 하고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두 가지를 잘 조율해 기능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관심사는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의 통폐합 여부. 언론을 상대로 하는 두 부서의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적지 않은 만큼 차제에 하나로 합쳐 비효율을 제거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두 조직을 통폐합할 경우 조직이 너무 방대해지는데다 같은 수석급인 대변인과 홍보기획관 사이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등 복잡한 문제가 많아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게 청와대 일부 참모들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금융비서관과 국정상황실 부활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

외신홍보 기능을 대폭 보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한 해외 언론들의 잇단 '한국흔들기'를 보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홍보 중요성을 새삼 느꼈다는 후문이다.

다만 외신대변인을 따로 두기보다는 현행 외신담당 부대변인 밑의 실무인력을 늘려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연합뉴스